

전남·광주, '2028 G20 정상회의' 유치 본격 시동

내달까지 기본구상안 마련...정부 개최도시 공모 대응 인공지능·에너지 기반 '연대·분산형 회의' 전략 추진

전남도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계기로 '2028 G20 정상회의' 유치 전략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남도는 9일 정부의 G20 개최도시 공모에 대비해 '2028 G20 정상회의 유치 기본구상안 연구용역'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은 전남·광주가 글로벌

별 정상외교 무대의 개최지로 도약하기 위한 사전 전략 마련 차원에서 추진된다. 앞서 전남도는 지난 2월 1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글로벌 도약 전략 가운데 하나로 2028년 G20 정상회의 유치 계획을 공식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용역은 그 후속 조치로, 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둔 전남·광

주의 경쟁력과 개최 가능성을 구체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전남·광주는 민주주의의 가치와 에너지 전환, 인공지능(AI) 기반 미래 산업 등을 유치 전략의 핵심 메시지로 내세울 계획이다. 민주주의를 실천해 온 도시라는 역사성과 함께 기후위기 시대 에너지 대전환의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 지역이라는 점, AI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포용적 사회 모델을 구현하는 도시라는 점 등을 국제사회에 강조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기존 국제회의의 단일 도시 개최

방식에서 벗어나 광주와 전남 권역을 연결하는 '연대·분산형 회의' 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다. 광주권은 김대중컨벤션센터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중심으로 문화외교 공간을 조성해 정상회의와 주요 국제행사를 진행하는 거점으로 활용한다. 동부권은 2026 여수세계박람회와 유엔기후변화 협약 당사국총회(COP33) 유치 과정에서 확보된 숙박과 관광 인프라를 기반으로 국제회의의 가능성을 분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부권은 재생에너지 기반의 실천형 회의 공간으로 구성해 에너지 전환 정책과 친환경 기술을 직접 체험하는 국제 협력 플랫폼으로 운영한다는 구상이다. 이처럼 광주와 전남 권역을 연결하는 다핵형 회의 네트워크를 구축해 새로운 국제회의 모델을 제시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번 연구용역에는 전남·광주의 도시 여건과 강점 분석을 비롯해 G20 정상회의 유치를 위한 기본 전략과 실행 계획, 차별화된 개최 방식, 주요 콘셉트와 핵심 메시지 등이 종합적으로 담길 예정이다.

전남도는 오는 4월까지 기본구상안을 마련한 뒤 단계별 추진 로드맵을 수립해 정부의 G20 개최도시 선정 절차에 대응할 계획이다. 손영도 전남도 정책기획관은 "이번 연구용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글로벌 정상외교의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적 준비 단계"라며 "기후와 에너지, 문화 등 전남·광주의 강점을 세계적 의제로 확장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G20 개최 모델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이재명 대통령, 중동상황 관련 비상경제점검회의의 주제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열린 중동상황 관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미국의 이란 공격으로 촉발된 중동 상황과 관련해 "향후 전개 양상을 예단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는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비상한 각오로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중동 지역 위기 심화로 글로벌 무역과 중동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상당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구체적으로는 "필요한 경우에는 100조원 규모의 마린드 있는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정부와 중앙은행 차원의 추가 조치도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민**

"통합특별시 주청사, 공론화위 거쳐 정해야"

김영록, 광주선관위서 통합시장 예비후보 등록



김영록 전남지사(사진)가 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주청사 선정을 위한 여론 수렴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6:3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밝히기는 어렵지만, 공론화 위원회를 통해 (주청사 관련)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특별시장 이혼자 마음대로 정하면 훌륭한 결정이라도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의통합특별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다른 후보와 단일화나 연대 등 가능성에 대해선 "예비 경선 등이 끝나봐야 그들과 얘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이날 오후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번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했다. 예비후보 등록으로 직무가 정지되면서 황기연 행정부지사가 직무대행을 맡게 됐다. 김 지사는 10일 광주, 전남 서부와 동부를 돌며 출마 회견을 진행할 계획이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o.kr

광주구청장협의회 "자치구 재정권 강화 필수적"

전남광주특별시장 후보들에 정책 질의

광주구청장협의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선거에 출마한 예비후보자들에게 '자치구 재정권 강화에 대한 질의서'를 전달하고, 통합특별시장으로서의 입장과 정책 방향을 12일까지 회신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협의회는 오는 7월1일 출범 예정인 대한민국 제1호 통합특별시가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목표로 하

는 만큼, 자치구가 실질적인 기초지방정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재정·행정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자치구가 높은 인구밀도와 행정수요를 감당하고 있음에도 취약한 세입 구조와 불균형적인 세출 구조로 인해 자치권이 제약받고 있는 현실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번 질의서의 주요 내용은 두 가지다. 첫째는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자치구에 대해 보통교부세 수준의 재정 지원을 약속할 의사가 있는지, 있다면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이며, 둘째는 정부의 보통교부세 자치구 직접 교부에 대한 예비후보자의 입장과, 관련 제도화를 위해 통합특별시장으로서 어떤 노력을 기울일 것인지에 대한 사항이다. 협의회는 현재 시·군에는 국가 보통교부세가 직접 교부되고 있으나, 자치

구는 그 대상에서 배제됐다고 강조하며 자치구에 대한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제기했다. 임택 광주구청장협의회장은 "예비후보자들의 답변을 바탕으로 자치구 재정권 강화와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통합특별시장과 자치구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재정·행정 모델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계획이다"고 말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광주시, 반려동물 음식점 동반출입 허용

식품위생법 개정 '반려동물 출입가능 업소' 기준 마련

이달부터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의 음식점·카페 동반출입이 가능함에 따라 외식 풍경이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는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안전기준을 갖춘 음식점에 반려동물과 함께 출입할 수 있다고 9일 밝혔다.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는 반려동물(개, 고양이) 출입이 가능한 음식점의 시설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 등 위생·안전관리 기준이 담겼다. 이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려는 영업자들은 법적 기준을 준수하는 경우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운영이 가능하다. 업소 출입구에는 표지판 등으로 반려동물 출입 가능 업소 여부를 안내해야 한다. 전체 음식점·카페 등에 반려동물 출입이 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소비자는 음식

점 출입구에서 반려동물 동반출입이 가능한지 확인한 후 이용해야 한다. 이 제도는 식약처가 지난 2023년 4월부터 약 2년간 규제 유예(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으로 운영,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의 위생·안전수준 개선과 업계·소비자 만족도 향상 등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한 뒤 이달 1일부터 시행했다. 광주시는 10일 광산구 청소년수련관에서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등 설명회'를 개최해 영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안전·위생 기준을 상세히 안내하고 영업자의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광주시는 또 식약처가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영업신고 세부 절차와 위생안전 기준 등을 담아 마련한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위생·안전관리 매뉴얼'을 자치구 누리집 등을 통해 영업자와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있다. **양동민** 기자 yang00@

전남도, 중동사태 비상경제 대책 TF 가동

시군과 재난안전 등 대책회의...상황 점검·분야별 대응 모색

전남도가 시군과 함께 최근 미국과 이란 간 군사적 충돌로 촉발된 경제 위기 최소화를 위해 '비상경제 대책 TF'를 긴급 가동하고, 재난 안전 대비에도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관련기사 3·4면** 전남도는 9일 도청에서 도·시군 합동 '중동사태 비상경제 및 재난안전 대책회의'를 열고 현재 경제상황을 점검하고 분야별 대응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회의에서는 중동사태에 따른 국내외 상황과 지역경제 영향을 분석하고 도민 피해 최소화 방안, 유관기관 협력 대응 체계 구축, 향후 대응 방향 등을 중점 논의했다. 전남도는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비상경제 대책 TF'를 가동하고, 10일 비상경제 점검회의를 열어 물가 안정과 에너지 공급, 도내 수출기업 통상 대응 등 분야별 대응 방안을 점검할 계획

이다. 또 소비자 물가 안정과 도내 수출기업 보호, 에너지 및 농수산물 수급 관리 등 지역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추가 지원 대책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가족 질병 확산 차단과 산발적 재난 예방 등 불철 재난 분야 전반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해빙기 지방 약화에 따른 시설물 붕괴, 주택 화재 안전관리, 사업장 위험시설 점검 등 안전사고 예방 대책도 논의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도민의 안전과 지역 사회 안정을 최우선으로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며 "중동 경제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 22개 시군,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에너지와 물류비 상승이 도민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현장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전남도, 수산식품산업 혁신에 1052억원 투입

마른김 가공·저온물류 등 산지 유통 인프라 확충

전남도가 가공·유통·수출·바이오를 아우르는 수산식품산업 혁신에 본격 나선다.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수출과 바이오 분야까지 확장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전략이다. 전남도는 올해 수산식품산업 혁신을 위해 52개 사업에 893억원을 투입하고, 수출·바이오 등 중장기 계속사업을 포함해 총 1052억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투자는 가공부터 유통, 수출, 바이오까지 수산식품산업 전 과정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통해 산업 구조를 고도화하고 수출 확대와 미래 산업 기반을 동시에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수산식품 분야에는 539억원을 투입해 가공산업 경쟁력을 높인다. 수산식품 가공설비 개선과 시설 현대화에 179억원, 마른김 가공공장 시설 개선과 김 건조기 교체에 100억원을 지원한다. 또 위생·안전 설비 확충 49억원, 산지 가공시설 설비와 위생시설 개선 127억원, 에너지 절감형 가공설비 도입 16억원 등을 추진해 품질 경쟁력과 생산 효율을 동시에 높일 계획이다. 유통·물류 분야에는 226억원이 투입된

다. 마른김 산지저장유통센터(FPC) 구축에 45억원, 호남권 소비지 분산물류센터(FDC) 조성에 60억원을 들여 산지 중심 유통 체계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수산물 대형·중형 저온저장 시설 확충에 99억원, 노후 수산시장과 유통 시설 개선에 14억원을 지원해 안정적인 수급 관리와 유통 효율을 높일 방침이다. 수출 경쟁력 강화와 미래 산업 기반 확충을 위한 인프라 구축도 추진된다. 국제 마른김거래소와 연구개발(R&D) 시설, 냉동·물류창고, 가공공장 등을 갖춘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은 중장기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 준공 이후 본격적인 수출 거점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또 해조류를 활용한 바이오 스마트팩토리 생산시설과 해조류 바이오 스마트팩토리 조성을 통해 수산식품산업을 바이오 기반 미래 산업으로 확장한다. 이와 함께 전일업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동화·위생·저장 인프라 확충에 108억원을 투입하고, 창업·기업 육성과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에도 20억원을 지원한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1면 '특별시장 경선'서 계속

대신 현직을 유지한 채 통합 준비와 시정 운영을 이어가며 책임 있는 행정 이미지를 강조하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결국 김 지사와 강 시장의 차이는 경선 전략의 접근 방식에서 갈린다. 김 지사는 직무 정지에 따른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조기에 선거 체제로 전환해 광주와 전남 전역을 동시에 공략하는 확장 전략을 택했다. 반면 강 시장은 현직 프리미엄과 행정 연속성을 유지한 채 예비경선을 관리하

고, 토론과 정책 경쟁이 본격화하는 본격 선거에서 승부를 걸겠다는 단계적 전략을 선택한 셈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러한 전략 차이가 실제 경선 과정에서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하고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김 지사는 조기에 선거 체제로 전환해 광주·전남 전역을 상대로 조직과 인지도를 끌어올리려는 흐름이고, 강 시장은 현직 이미지를 유지하며 경선을 단계적으로 치르려는 전략"이라며 "두 방식 가운데 어느 쪽이 효과를 낼지는 실제 경선 과정에서 판기를 날 것"이라고 말했다.